

일본 오염수 방류... 여야 대립

민주당 "정부, 면죄부에 열중" 국민의힘 "선동괴담 그만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립했다.

먼저 민주당은 '전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일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일본의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본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소집하고 '국민 안전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또 이 대표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일본해

에,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맹폭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 국민의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핵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다"고 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하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세 나라 정상 간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괴담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고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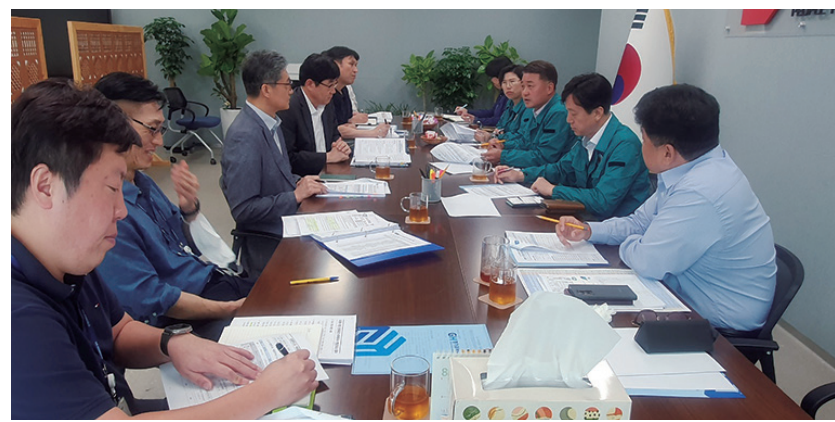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일본의 방류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들끓고 있는 당내 내용과 연일 불거지는 방류 비판의 따가운 시선을 돌릴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논평했다. 또 강 대변인은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했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울러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 국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박우현 국무1차장의 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열어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국 측 전문가의 상주는 불발됐음을 드러냈다.

홍정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등은 2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로부터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구조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추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안전진단 결과 보고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2일 공동 주택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경기도 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해형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로부터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구조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결과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GH는 지난 3~11일 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 건설 현장 4개

단지, 준공 완료 6개 단지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진단에 나선 결과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는 도내에서는 142개 단지(12만6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와 GH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로 도민들의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영기 정무수석은 "문제점이 발견된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보강·보수 역시 주민들의 삶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와 GH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코인 거래' 김남국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심 의결과 관계없이 불출마" 국회 윤리특위 징계 연기 결정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하

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예정된 김 의원의 징계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강승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22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인천시의회, 열린의회 구현 전문가 의견 의정활동 반영

인천시의회는 22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

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허식 의정발전자문위원장 주재로 인천시의회 주요 현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경과 설명 등 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32년 만

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능동적인 민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안종삼 기자

모든 의원과 공유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시민단체·학계 및 기업대표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2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왼쪽에서 다섯번째) 의원은 18일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역교육협력 파주협의회 위원장 선출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파주교육발전 기여 앞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민주당, 파주2) 의원은 18일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파주교육지원청·파주시의회·파주시청·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교육활동을 계획·평가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

하기 위한 심의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2023 파주이음학교 선정결과 심의 등의 사업 보고와 이에 대한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조성환 도의원은 "정책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요 운영 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파주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파주시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참여기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김인창 기자

수사개시 가능 부서 현황 정보공개 의무 강화

김의겸 의원

대검찰청이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던 '수사개시 가능 부서 현황'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의겸(민주당, 비례·사진) 의원이 기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수사감사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은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과 4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수사개시 가능부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일 동안 제한적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했고,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이 보고자료에서 빠졌고 공개된



정보는 검사 및 해당 수사관의 현원 숫자만 보고하는 등 법안의 취지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존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도입 취지는 '검사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는 중재안이었다'가 '특수부의 숫자까지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역시 반영되어 수사인력의 운영 현황을 보다 실용적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국민공개 조항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발표

안민석 의원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유·초등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원(소유부지 528억원, 시설비 2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안민석(민주당, 오산·사진) 의원은 지난달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



부, 경기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경기도의회,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

백혜련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민주당, 수원을·사진) 의원이 지난 14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로서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지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쟁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희열 기자